

- 한.미 관세 협상 및 FTA 종식과 한국 경제.기업의 대응 전략 -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2025. 09. 04. (목요일)

오후 2:00 ~ 4:00

장소 : 푸른홀

발제 1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2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임교수

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ksy@cfe.org)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경제통상 및 안보 정책 방향과 과제

일시 2025년 9월 4일(목)

장소: 자유기업원 푸른홀

영등포구 여반 322 5층(9호선 선유도역 8번 출구)

발제: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2025년 8월 25일 이후 대미 관세 현황

-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25% 상호 관세를 부과
- 이후 협상 끝에 7월 30일, 양국 간에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합의는 8월 1일부터 발효된 상태
-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이슈는 중심 의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일 "양국 간 거래에 대한 이해"에 따라 합의된 25% → 15% 관세 인하 조정이 최종 확정, 다만, 실제로는 여전히 '공식적인 문서화(agreement formalization)'는 완료되지 않았음
- 양국은 관세와 관련한 합의를 선언했지만, 공동 성명이나 Fact Sheet 등은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문서 작업이 지연 중
- 더불어 농산물 시장 개방, 자동차(15%) 등 품목별 관세 적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남아 있으며, 투자 펀드 구조 및 조건에서도 양측 간 이견이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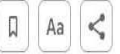
항목

상황 변화

South Korean negotiators struggle to close gaps with US despite summit, tariff deal

By Hyunjoo Jin and Joyce Lee

September 1, 2025 10:06 PM GMT+9 • Updated 12 hours ago



U.S. President Donald Trump mee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at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August 25, 2025. REUTERS/Brian Snyder/File Photo Purchase Licensing Rights

관세율	25% → 15%로 합의했으나 문서화 는 지연 중
쟁점 남은 분야	농산물 개방,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별 관세, 투자 펀드 조건 등
기업 전략	미국 내 투자 확대, 공급망 재편, 리 스크 분산 등

한국(기업)의 주요 대응 전략 분석

- 1. 문서화 및 정책 확정 모니터링 강화: 정부와 기업은 정상회담 이후 지연된 문서화 작업(예: 15% 관세, 관세 대상 품목 등)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 대응책 마련
- 2.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현지 생산 강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특히 조선(1500억 달러), 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협력이 약속된 만큼, 미국 내 생산·R&D 시설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3. 자동차·반도체 산업 등의 불확실성 대응: 15% 관세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용 구조 조정 및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User) 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온 것 철회)
- 4. 농산업계의 대응책 마련: 미국 측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지속되는 만큼, 관련 업계는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예: 수익성 확보, 국내 보호장치 강화 등)을 준비
- 5.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 구조의 재검토: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 외 지역, 예컨대 베트남 등 동남아, 북미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투자 위험을 분산
- 6. ESG 및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 디지털 규제, 환경 기준 강화 등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ESG 역량, 친환경 인증, 인증 기준 대응 등을 강화하는 전략 필요

한-미 통상 무역 협정

구분	한국 (7.31 발표)	EU (7.27 발표)	일본 (7.22 발표)
경제규모	약 1.87조 달러	약 19.41조 달러	약 4.26조 달러
대미 무역수지	-660억 달러(2024)	-2,356억 달러(2024)	-685억 달러 (2024)
상호관세 (4.2 → 7.31 수정 후)	25 → 15%	20 → 15% (MFN 포함)	24 → 15%
자동차 관세	15% (관련 행정명령 미 발표)	15% (관련 행정명령 미 발표)	15% (관련 행정명령 미 발표)
철강 관세	50% 예상 (미언급)	50%	50% 예상 (미언급)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15%	-
대미 투자 약속	3,500억 달러 (조선 포함)	6,000억 달러 추가 (3년간)	5,500억 달러
주요 협상 내용 (미국 측 발표)	3년 반 동안 1,000억\$ 에너지 구매 (LNG),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 수용	7,500억\$ 미 LNG 구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15%,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유지 원산지 협력, 디지털 무역 등	자동차,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및 군수, 항공기 구매
주요 쟁점	자동차 관세 시행일, 투자 운용	철강 관세 인하	자동차 관세 시행일, 투자 운용

출처: KOTRA 지역통상조사실 글로벌 이슈, 박민경 발제문 '미관세 합의 동향과 한미 합의 후속과제'(2025.08.19) 중

미국의 관세 전략 및 통상협정 우선고려

통상본부장, 텍사스-조지아 하원의원 면담...협력 논의

2025.08.14. 오후 5:54.

- 미국의 산업경쟁력 회복(자동차, 철강업계)
- 미국 농업계: 상대국 보복조치의 주요 타겟
- 재정 이슈: 금리, 미국의 재정적자

ECONOMY

Why Trump's second trade war could be worse for US farmers

Higher tariffs on nearly all major U.S. trading partners are piling pressure on farmers already struggling with soaring agricultural supply costs and elevated rates

BY MONICA CORDERO - JUNE 30, 2025 5:45 AM



It of Donald J. Trump to Okpo Shipyard (June 5, 1998)

우리조선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OUR SHIPYARD

memorative photo in front of the Main Building, Okpo Shipyard, Geo



Tour of Okpo Shipyard, Geo

출처: KOTRA 지역통상조사실 글로벌 이슈, 박민경 발제문 '미관세 합의 동향과 한미 합의 후속과제'(2025.08.19) 중

한미 정상회의 이후 불확실성/과제

- 미국의 최대 수요인 조선업(MASGA)을 협상 레버리지로 맞춤형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
- 품목 관세: 자동차 관세 시행 명령 필요, 반도체 최대국 대우 명확화 필요, 철강/의약품
- 한미 FTA 혜택 지속 vs. 사실상 무력화... 업계 불확실성 여전
- 대미 시장 개방(자동차, 농산물 등): “completely open”, “they will accept”
- 대미 투자 약속(3,500억 달러)의 실질 운영 방안
 - ✓ (美)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투자처에 3500억달러를 투자(트럼프), 수익의 90%는 미국
 - ✓ (韓)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와 반도체·원자력·에너지·2차전자·바이오 등 경제안보 지원 대미 금융 패키지 2000억 달러로 실질적 금융투자는 2천억 달러

출처: KOTRA 지역통상조사실 글로벌 이슈, 박민경 발제문 '미관세 합의 동향과 한미 합의 후속과제'(2025.08.19) 중

품목별 상황과 대응 현황(2025.09.01)

- **반도체** 1) 지원 확대: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예산이 33조 원 규모로 확대. 대출, 보조금, 인프라 투자(예: 용인·평택 등 산업 단지 지하 전력망 강화 포함)를 통해 업계의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 2) 생산 구조 조정: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로 인해,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한국 또는 미국 현지로 생산 기반을 옮기는 전략이 고려
- **자동차** 1) 관세 인하 지연: 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 인하 시점은 명문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25%가 유지 2) 기업 대응: 당장 제품 가격 동결을 통해 관세 부담을 흡수하며 버티는 중, 공장 설비 투자 및 미국 현지 생산 확대, 프로모션 강화 등을 준비
- **조선 및 방산** 1) 미국 내 투자 확대 전략: HD 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를 합병하여 미국 조선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펀드를 조성,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MRO(유지보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국내 조선업과 균형 발전 모색, 일자리 창출 등)
- **식품·가전 등** 1) 식품 업계: 관세 부담으로 인해 미국 수출 제품 가격을 약 8% 이상 인상 불가 피한 상황 직면; 2) 가전 업계: 철강 관련 품목에 고율 세율이 적용되자,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또는 설계 변경 등 대응 전략을 모색

품목별 상황과 대응 현황(2025.09.01)

항목	관세 상황	기업의 대응 전략
반도체	최혜국 대우 보장 → 관세 완화	정부 금융지원 확대, 인프라 투자, 생산 기지 재편
자동차	관세율 인하 지연	가격 동결, 생산 현지화 추진, 향후 명문화 위한 외교적 협상 중
조선·방산	투자 연계 관세 완화 유도	현지 합병·MRO 확장, 미국 조선업 강화 전략과 연계 투자
식품·가전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 압박	소비자 가격 조정 계획, 현지 생산 확대 또는 원가 구조 재편 가능성 타진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투자

2025.07.31 한미관세 협상에서 조선투자 제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중 1,500억달러(약, 200조원)를 조선에 투자
 2025. 8.24-26 한미정상회담에 조선산업 대표 동행
 -정기선 HD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미국 조선산업	글로벌 조선산업 특징(한국)	한-미조선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선 패러다임
오래된 조선소, 한때는 세계 1위 조선국이자 최고 기술보유 국가, 함정 외에는 건조량 미미	우리 나라만 빼고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상 함정 중심 건조, 한국과 중국의 상선이 전세계 물량의 90~95%. 중국이 60~70%, 전세계 제조량을 다 합쳐도 중국보다 적음	한국의 수출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NS(신조)과 MRO(유지보수) 지원 시급	- 제품, 기술, 인력의 글로벌 공급망	한미 협력이지만 조선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전략이 필수
- 지연된 생산기간이 주요 요소로 알려짐	-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	- 미국과의 two-top
- 사실상 구체적인 원인은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음	- 우리 나라는 주력 수출산업	- 초격차 조선기술은 한국 주도
	- 내수가 없는 수출, 상선위주 건조	- 에너지, 통신, 국방, 안보, 외교, 인력 등에서 복합 협력 분야
	- 고부가 선박 위주 건조	
	- 전략 상선은 사실상 건조 전무	

기대효과

1) 전략적 시너지 확산

공동 설계·공동 건조 모델은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결합한 Win-Win 구조로, 미국 내 조선소 정상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미 조선 영역 협력의 새로운 표준

2) 법적·제도적 틀 정비 필요

'Buy American Act', 'Jones Act' 등 미국 국내법들 협력 사업에 장애 요소. 향후 미의회 차원의 규제 완화 논의와 특별 예외 적용 필요

3) 해양 안보 및 공급망 기회 강화

미 해군 함정 및 쇄빙선 확충 정책, 중국의 해양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조선협력은 미래 해양안보 협력의 전략적 기반

4) 글로벌 조선업 패권 협력 주도권 확대

한국은 세계 2위 조선 강국으로서,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화

MASGA

현황

미래 전망

투자 규모

\$150B MASGA + 확장 증대 예상
HD현대 합병 추진

협력 방식

공동 설계·공동 건조, MRO 수주
모듈화 공법 확대

법적 과제

Buy American , Jones Act 제약
제도 보완 및 특례 필요

전략적 의의

안보 기반 강화
해양 안보 협력 및 산업 주도권 강화

역할 확대

조선 강국 지위 강화
전략/동맹 산업 통합 모델 진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안보' 전략

- **1. 동맹 현대화 및 국방력 첨단화 추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논의. 특히, 한국군을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스마트 군(융합 첨단 군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방 예산 확대
- **2. '전략적 유연성' 논의 및 미-중 간 균형외교의 딜레마:** 미국은 주한미군이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보를 희망. 한국 입장에서 '다소 수용하기 어렵다'며 협상을 통한 조정과 합의 가능성을 강조(미 군사안보 전략 변화에 준하는 한국의 안보 협상, 원자력 분야 협상 진행 중)
- **3. 국방 예산 증액 및 대북·대외 협력 강화:** 한국은 국방 예산 및 대북 교류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예산안 구성. 이를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 대화 및 협력에도 문을 여는 '이중적 접근' 전략
- **4. 외교 다변화 강화(다자주의 외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하며, 전통적인 '허브 앤 스포크(하나의 강력한 중심 국가(허브)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스포크)과 양자적 동맹을 맺어, 이 동맹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외교 전략, 미국은 그동안 한국 외에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개별적인 군사동맹관계를 유지)' 모델을 넘어 한·미·일 삼각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장하려는 외교 전략을 구사. 또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계속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전략을 명확히 했습니다.
- **** 미국의 새로운 '격자 울타리' 안보 전략:** 미국을 필두로 하였던 여러 양자동맹구조를 파편화 하여 역내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구성, 각 협의체에 미국이 당사국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동맹국/우방국들의 참여 증대에 따른 방위비 분담 증가 우려)

한·미 원자력 협정(소위 '123 협정') 주요 논의 및 발전

- 1954년 미 '원자력법 제123조(Section 123 of the U.S. Atomic Energy Act of 1954)'에 따라 미국과 타국 간의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협정안. 한국과 '123 협정' 체결 및 갱신: 최초 체결: 1974년, 가장 최근 갱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유효기간: 20년 (2035년까지)
- 주요 내용: 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적 재처리 불가; 2) 우라늄 농축: 20% 미만의 저농축도 불가 (미국 승인 필요); 3) 협의권 확보: 한국은 일부 재처리 연구 개발을 조건부로 허용받음; 4) 기술 이전: 제한적 기술이전 가능, 수출 시 미국 승인 필요로 구성.
- 1974년 협정은 한국의 기술과 정책을 미국이 강하게 통제하던 시대의 협정이었다면, 2015년 협정은 한국의 원전 강국 위상과 자율적 정책 수행을 일정 부분 인정한 협정 평가, 하지만 여전히 재처리·농축 권한은 제한적이며, 향후 4가지 관점(아래)에서 재협상 또는 포괄적 보완 협정의 필요성 증가 중.
- 1) **에너지 안보**: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 가능
- 2) **기술 주권**: 독자적 농축·재처리 기술 보유는 핵심 기술 자립의 관문
- 3) **원전 수출**: 미국 기술 포함 시, 한국 원전 수출에 항상 미국 승인이 필요 → 협정 개정 없이는 제한 지속
- 4) **지정학적 자율성**: 국제 사회에서 기술적·정치적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도 핵심 사안

2025년 한-미 간 새로운 원자력 협정 가능?

- 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논의**: 한국은 2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을 통해 국내 핵연료 자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 현재 협정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20% 이하)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 "산업적·환경적 목적을 위한 재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협정 내 다른 방안을 통한 해결 의지를 표명
- 2.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JV) 설립 논의**: 한전·한수원이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강구.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의 미국 및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유력한 통로로 평가,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내용에는 한·미 원전사의 지역 제한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JV는 이 제약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
- 3. **원자력 주권 강화 및 전략적 기반 마련 의미**: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 핵 폐기물 처리 능력 확보,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원자력 정책의 주권 강화' 의미, 특히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2030년부터 포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처리는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옵션으로 논의**

한미 정상회의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 비교

전략목표: 북한

	한국	미국
목표	실질적 군사 억지와 평화 공존 병행	군사적 억지 중심,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강화
대북 태도	조건부 대화와 억지력 강화 병행 (양면 전략)	대화보다는 압박과 봉쇄 중심의 태도 고수
북한 핵무기	단계적 비핵화 유도 → "핵 동결-비핵화" 전환 로드맵 구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고수

주한미군과 동맹 전략

	한국	미국
주한미군 역할	방위 중심 + 유사시 통제권 재협상 논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원함 → 인도-태평양 전체 활용 가능성 모색
전작권 전환	자주 국방 위해 조건부 전환 추진	기술력 및 상황 고려해 점진적 이전에 동의
동맹 성격	상호존중 기반 포괄 동맹으로 확대 희망	군사 중심 전통 동맹 구조 유지하려는 성향 강함

첨단 기술·방위산업 협력

	한국	미국
공동 R&D	국방기술 자립 위한 국산화 및 기술이전 희망	기술 유출 우려로 제한적 이전에 그침
방산 수출	방산 수출 동맹 모델로 확장 희망 (폴란드, 중동 등)	미국 중심 수출 체계 유지 원함
미사일 방어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자립 강조	한·미·일 통합 MD 체계 추진 희망 (특히 THAAD 연계 확대)

외교 및 안보 연계 전략

	한국	미국
중국 견제	미·중 균형외교 유지 희망 (경제 의존도 고려)	중국 견제 강화(한미일 군사 협력 중심)
북·중·러 삼각축 대응	외교적 완충 역할 강조	압박과 제재 중심 전략 선호
지역 역할	글로벌 중추국가(GK) 전략 강조	아시아 전진기지로서의 한국 활용 중시

공통점: 양국 모두 북한의 도발 억제, 동맹 강화, 기술 협력 확대에 동의.
차이점: 미국은 글로벌 전략 중심으로 안보를 설계하며, 한국은 지역 안정과 국방 자립에 방점

한-미(한-미-일) 안보 협정의 미래 전망

1. 전작권 전환의 실질화

한국은 자주국방 기반 강화를 통해 전작권을 조건부 전환에서 실질 전환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큼. 향후에는 '한국 주도, 미국 지원' 모델의 연합작전 체계 구축(?)

2. 북한 핵 확장억제의 실질적 보완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핵자산 순환배치, 전략자산의 정례적 파견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독자적 정찰·정보 능력 확보에 투자 중.

3. 기술·방산동맹으로의 확장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AI, 사이버, 우주, 핵융합, 드론 등 첨단 분야 협력으로 전환중(방산 수출 협력 체계가 확대되며, 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에서 점차 산업 동맹으로 확장될 가능성 큼)

4.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통합 훈련이 증가할 전망(다만 한일 간 역사·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됨).

2025년 하반기 관세 영향 완화 전략

1. 환율 관련 대응 전략: 하반기 우리 수출 전선은 상반기의 '트럼프 관세 폭탄' 여파 예상: 2025년 6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주요 환율 감시 대상국 목록에 추가(조작국 아님, 2차 무역흑자 연간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비중 GDP 대비 3% 초과;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GDP 대비 2% 초과); 한국은 첫 두 항목 기준 충족 사례)

- 환율은 부과되는 관세 숫자만큼이나 각국의 수출과 직결되므로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가능성
- 트럼프 1기 한미 FTA 재협상 때도 환율에 관한 문제 거론, 추가 협의시 다시 재기 가능성 큼

2. 합의 문건 및 이행 부문: FTA에만 익숙했던 우리가 처음 보는 '합의 형식'의 함정에 유의:

- 미-영 무역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일반 조건(general terms)' 형태로 공개, 미-인도네시아 무역 합의는 '공동성명', EU와의 합의는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서만 그 내용이 파악
-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모든 협정을 '시장개방, 투자·구매 약속 이행'이라는 조건부로 만들고, 더딘 분쟁해결절차를 지닌 WTO 대신 '스스로 이행 여부를 평가'할 예정, 이 과정에서 무엇을 이행 위반으로 판단할지,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지 불투명하며 이에 대비 필요

3. 다자간 FTA 점검: 일본이 15% 관세에 최혜국대우(MFN) 관세 포함 여부로 큰 곤욕을 치를 때,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상대적으로 무난히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음.

- 미국의 압력을 받는 많은 국가들이 협력과 무역 다변화를 모색(신규 FTA 발굴)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던 기존 FTA 체결국들과의 업그레이드 협상에도 새로운 동력 예상
- 중국·미국 패권 경쟁 속 대안적 무역 질서 강화 차원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 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2023년: 영국 가입 확정 총 12개국) 가입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통상 전략의 다음 스텝(환율 관련 점검) 하반기 우리 수출 전선은 상반기의 '트럼프 관세 폭탄' 여파 예상

Turnberry 체제의 도래?

그리어 대표(US 무역대표부)의 2025년 8월 7일 뉴욕타임지 기고: "Trump Round"(Turnberry 체제?)의 도래 주장은 실효성 검증 이전에 이러한 발상의 충격효과가 세계로 확산

- Trump Round 주장의 주요 메시지는 자국 우선주의적 국익 추구,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선별적 시장 체제 운용, 사후적 분쟁 해결이 아닌 사전적 이행 감시 체제, 시장 중심 자유무역을 보완하는 정책 중심 무역 등으로 이해

- 미국 기업과 가계의 소비 수요 시장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고려하면, 미국 중심의 신판관주의적 국제경제 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다각도 논의와 대비 필요

- 2025년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협상 + 조선업 투자 + 군사 협력 이 하나의 세트로 다뤄진 점은 전형적인 Turnberry 체제의 사례(?)

Turnberry 체제(?)의 특징

동맹의 거래화

전통적인 안보 공약(예: 주한미군 방위, 확장억제)을 경제·통상 협상 카드와 직접 연계.
"안보 제공 ↔ 경제적 양보"라는 구조로 재편.

관세·투자·안보의 연동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인하, 투자 펀드, 방산·조선 협력등이 모두 안보 공약과 맞물려 논의됨. 즉, 군사동맹을 단순한 안보협정이 아니라 포괄적 패키지 거래로 이해.

다자주의 약화, 양자주의 강화

기존 NATO, CPTPP, WTO 같은 다자 체제보다 개별 협상과 쌍무적 합의를 중시. 트럼프 행정부가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동맹국 맞춤형 조건부 보장을 강조하는 흐름.

정치적 상징성

Turnberry는 트럼프 개인의 사업장이자 정치 브랜드이므로, 이 개념은 정책의 개인화·사업화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 내포.

The New York Times

OPINION
GUEST ESSAY

Trump's Trade Representative: 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골프 리조트(Turnberry Trump Turnberry)

정부는 기업을 위해:

국내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회사의 어려움 극복 및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

미국 관세를 피해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증가에 대한 무역구제 정책 내지 우회수출방지 강화,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등이 적극적....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 역시 병행해야...

감사드립니다 !!

추가 질문은 이메일(아래)로 부탁드립니다!!

sanchito@hanmail.net
ssha24@mofa.go.kr

2025.9.4. 자유기업원 세미나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발표: KIEP 북미유럽팀 장영욱 연구위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례

-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 IV. 나가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차례

-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 IV. 나가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트럼프 2기와 세계 경제 질서의 변곡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세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하여 자유무역 질서 전복 시도
 - WTO, USMCA, 양자 FTA 등 기존 협정 정면 위반
 - 일부 국가와 협상 후 8월 7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시작
- 반이민 정책도 대거 시행 중
 - 남부 국경 지역에 추가 병력 배치 / 난민 심사 중단 / 일반 이민자 비자 심사 조건 강화 / 미등록 이주자 및 난민 본국 송환 / 여행자와 유학생 입국 검열
- WHO, 파리협정 등 국제 협약 탈퇴
- USAID 통한 해외원조 대폭 축소

국가별 적용 미국 상호관세율

8월7일 오후 1시 1분 부터 적용 (한국시간 기준)

50%	브라질 (7월30일 서명, 적용시기 미정)
41%	시리아
40%	라오스 미얀마
39%	스위스
35%	세르비아 이라크 캐나다 (캐나다는 8월1일 오후 1시1분(한국시간) 부터 적용)
30%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제리
25%	몰도바 브루나이 인도 카자흐스탄 튀니지
20%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19%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18%	니카라과
15%	대한민국 가나 가이아나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볼리비아 북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콰도르 요르단 우간다 유럽연합(EU)* 이스라엘 일본 잠비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르키예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푸아뉴기니 피지
*유럽연합(EU)은 기본 관세율 15% 이상 품목은 0%, 기본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15%에서 해당 관세율을 뺀 값을 적용	
10%	포클랜드제도 영국

자료: 백악관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트럼프 2기와 세계 경제 질서의 변곡점 (계속)

- 8월 7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
 - WTO로 대표되는 기존 다자무역체제는 불공정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싸게 물건을 만드는 중국 같은 나라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
 - 미국의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WTO를 대체하는 “트럼프 라운드” 시작
- 트럼프는 Outlier인가?
 - 바이든 시기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중국 견제 정책...
 - 주요 경제신문에서 산업정책 언급횟수 1990년 1000회 미만에서 2003년 16,000회로 16배 증가
 - 2010년대 중반부터 대외정책 중 자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 비중 급증

Trump's Trade Representative: 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

Aug. 7, 2025



Photo Illustration by Shannon Lin/The New York Times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League of Nation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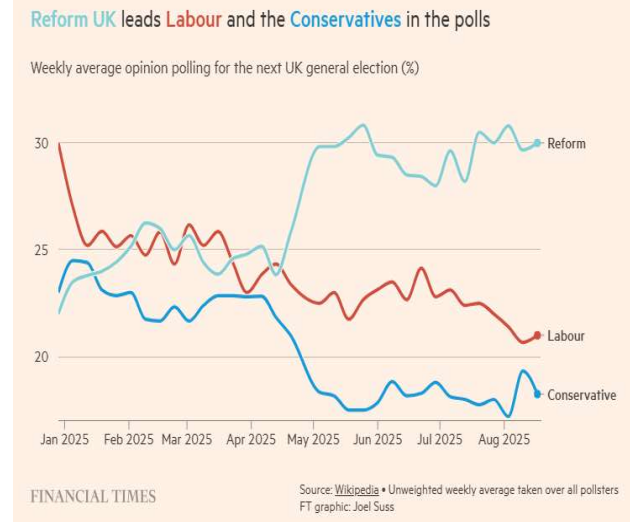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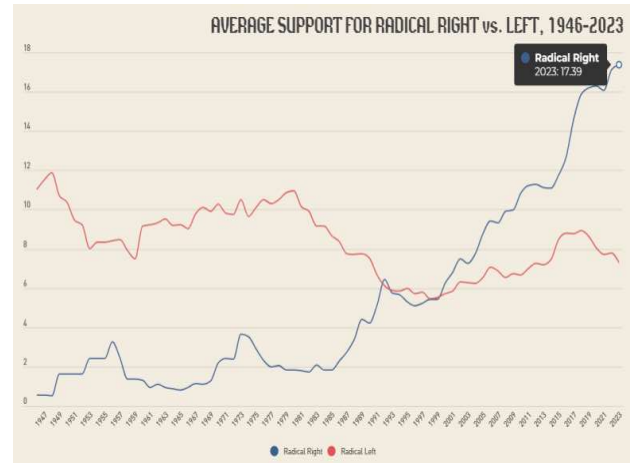


자료: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16/11/19/league-of-nationalists>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반세계화는 전 세계적 현상

-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산업경쟁력 확충 위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수출입 통제, 투자 심사 강화 등 산업·통상 정책 시행 빈도 증가
 - 미중 전략갈등, 영국의 EU 탈퇴, 반이민/반경제통합 정서 부상/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 경제적 효율성 << 지정학적 고려
 - Ex) 유럽연합: REPowerEU, 반도체법, 역외보조금규정, 공급망실사법, 그린딜산업계획(핵심원자재법 & 기후중립산업법), EU경제안보전략, EU방위백서 등등
-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적/자국우선주의적 정치세력의 영향력 급증



차례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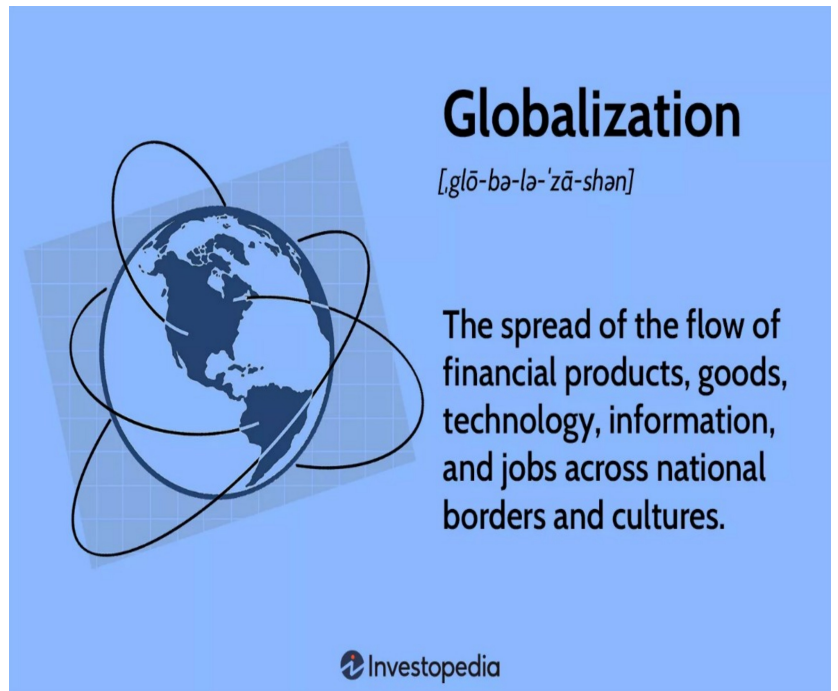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IV. 나가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세계화와 세계 경제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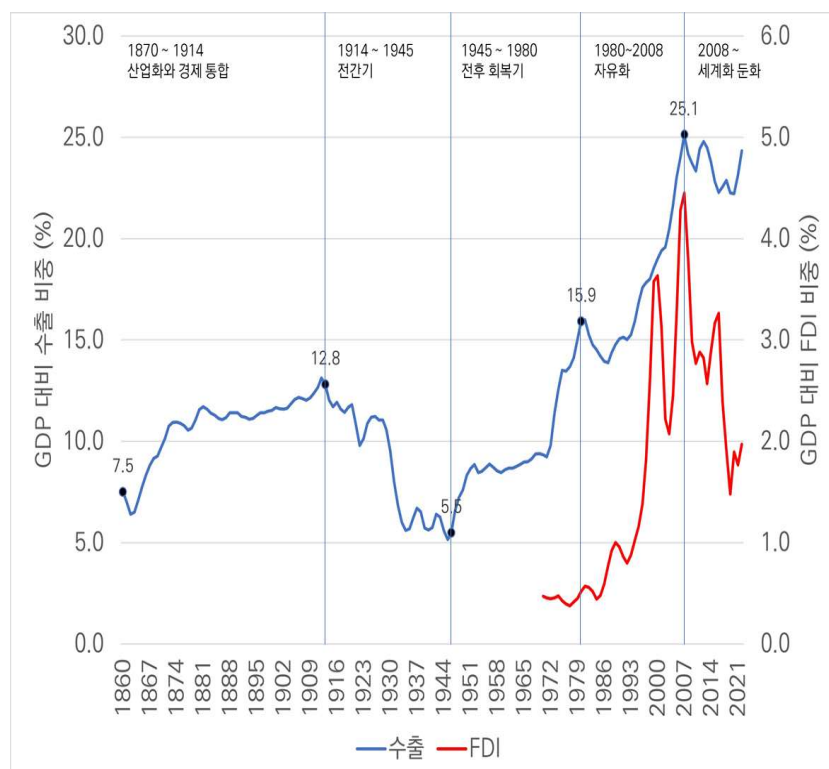
- 세계화: 국제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감소
→ 국가 간 교류 촉진
 - 1) 상품 및 서비스 무역
 - 2) 생산 요소 (자본, 노동) 이동
 - 3) 기술, 아이디어, 정보 교환
- 세계 경제 질서: 1), 2), 3)의 국가 간 거래를 관장하는 일방적 또는 상호적 국제 관계



자료: <https://www.investopedia.com/terms/g/globalization.asp>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국제 무역의 역사



자료: 장영욱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제1차 세계화의 물결

- 1850년~1910년 무역량의 급격한 증가
 - 교통의 비약적 발달: 증기선 상용화 + 냉장 기술 발전
 - 고전경제학자의 자유무역 옹호
 - 영국-프랑스 Cobden-Chevalier Treaty 체결 (1860, 최혜국 대우 조항 포함)
 - 금본위제 아래 국제결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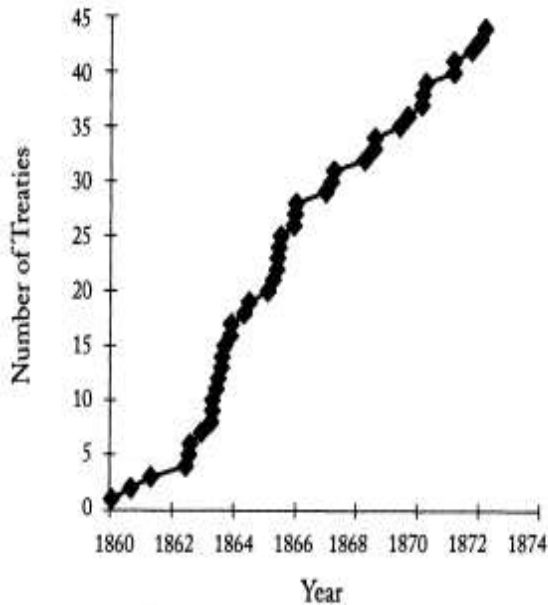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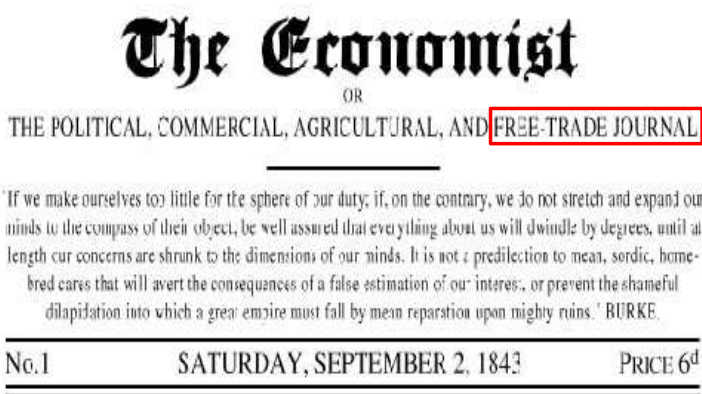


FIGURE 15
NUMBER OF COMMERCIAL TREATIES SIGNED AMONG
EUROPEAN STATES, PLUS U.S.
(1860-72)

자료: Lazer, D. (1999). The free trade epidemic of the 1860s and other outbreaks of economic discrimination. World Politics, 51(4), 447-483.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19세기 대이주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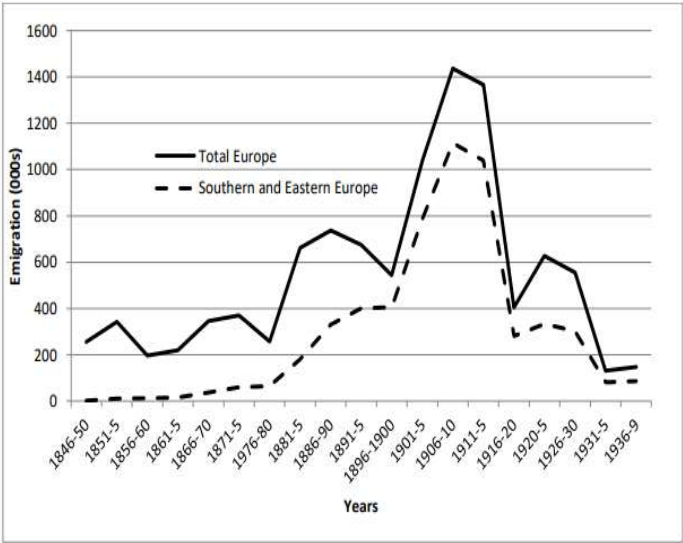
- 19세기 국제이민의 급격한 증가
 - 주로 유럽 → 신대륙으로 이주
 - 유럽은 인구 포화, 미국은 노동력 부족
 - 이민 관련 제한 거의 없었음

Top countries

	# total emigrants (million persons)	emigration rates (per 1000 population)	# total immigrants (million persons)
1	Britain 11.5	Ireland 12	US 33
2	Italy 10	Norway 7	Argentina 5
3	Ireland 7	Italy 6	Canada 5
4	Germany 5	Britain 5	Brazil 5
5	Spain/Portugal 4.5	Sweden 5	Australia 4

Source: Ferenczi and Willcox(1929), Hatton and Williamso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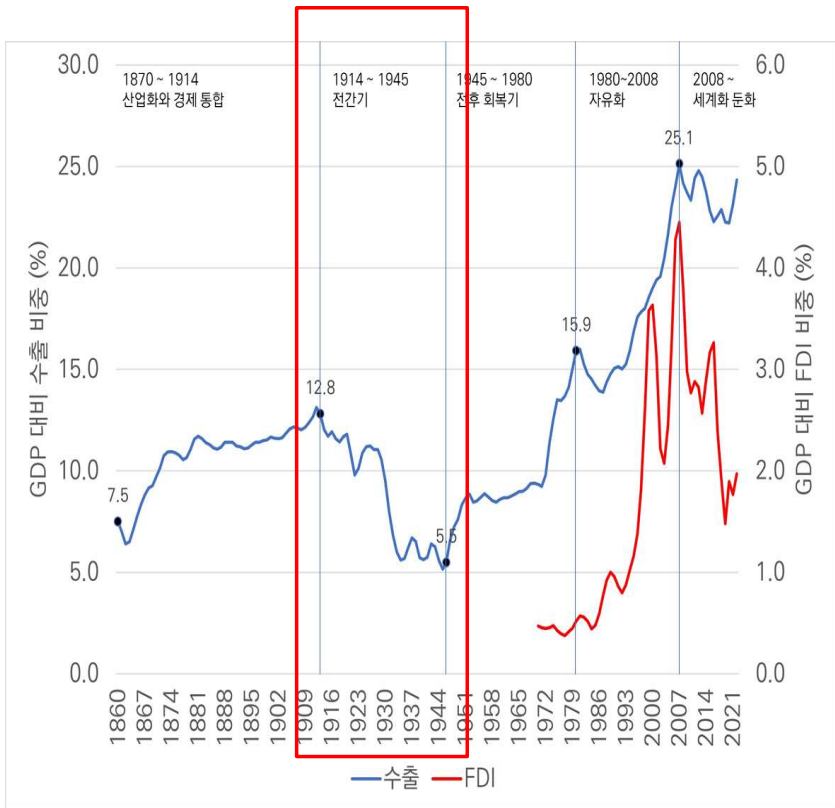
Figure 1: Emigration from Europe 1846-1939 (five-year averages)



자료: Hatton and Ward (2019).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TLANTIC ECONOMY 1850-1940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전쟁, 침체, 세계화의 후퇴



자료: 장영욱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Winners and Losers of Globalization

-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국가간 가격 및 임금 수렴
 - 자본가, 지주, 노동자 간 소득 재분배 발생
 - 국가별/계급별로 이해 관계 차이
- 세계화의 반동
 - 농업관세 재도입 (독일 1879년, 이탈리아 1887년, 프랑스 1892년)
 - 미국 이민제한법 제정

In favour of	Land-abundant	Labour-abundant
Autocracy	Free trade	Protectionism (C. Europe)
Democracy	Protectionism (US)	Free trade (Bri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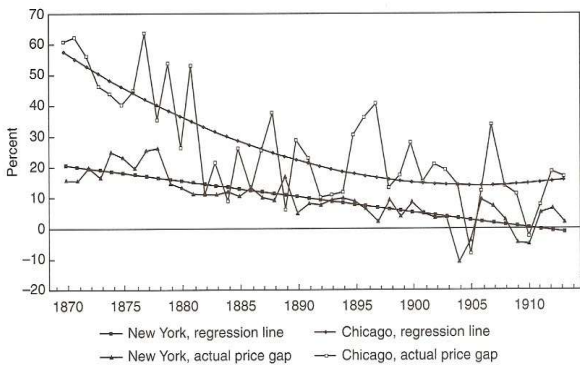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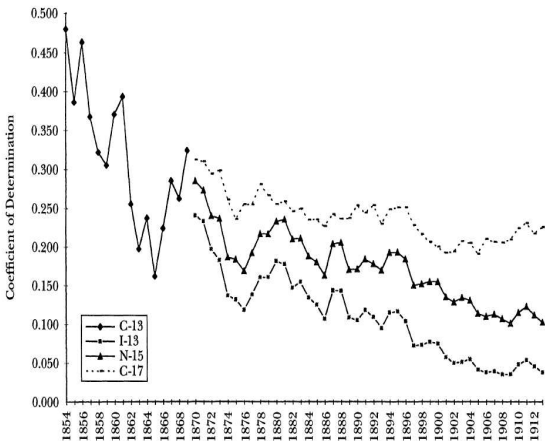


Figure 3.4
Wheat price differentials: British Price–U.S. Price (percent of U.S. price). Source: Taken from data underlying O'Rourke and Williamson (1994).

자료: O'Rourke, K. H., & Williamson, J. G.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MIT press.

Figure 2
International Real Wage Dispersion, 1854–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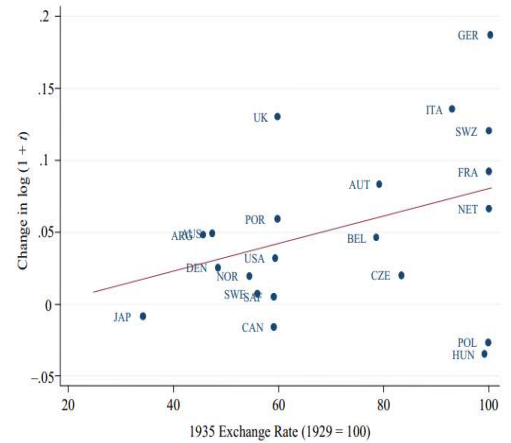


자료: Williamson, J. G. (1998) Globalization, Labor Markets and Policy Backlash in the Pa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4)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황금 족쇄(Golden Fetters): 국제금융제도와 무역

- 전간기 국제금융 제도(금본위제)의 제약이 대공황 발생, 심화, 전이, 회복 지연에 기여
- 금본위제 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자체적인 환율 및 통화정책 시행이 어려우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 선택
 - Sterling Area (영국 및 북유럽) vs Gold Bloc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 금본위제에서 먼저 탈퇴한 국가일수록 대공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



자료: Eichengreen, B., & Irwin, D. A. (2010). The slide to protectionism in the great depression: who succumbed and wh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0(4), 871-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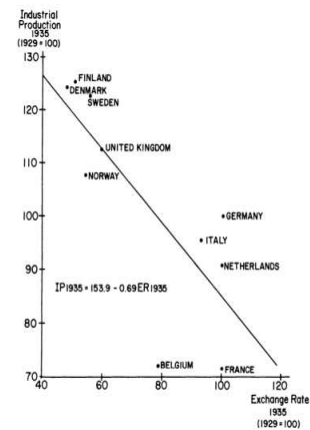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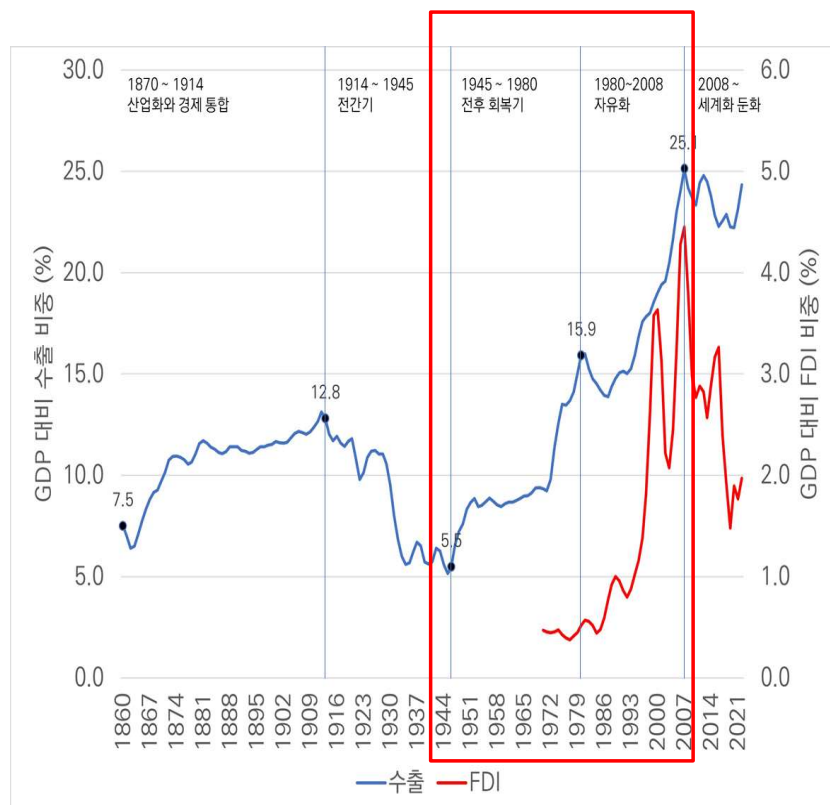


FIGURE 1
CHANGES IN EXCHANGE RATES AND INDUSTRIAL PRODUCTION, 1929-1935

자료: Eichengreen, B., & Sachs, J. (1985). Exchange rates and economic recovery in the 1930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5(4), 925-946.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전후 세계 경제 질서 구축과 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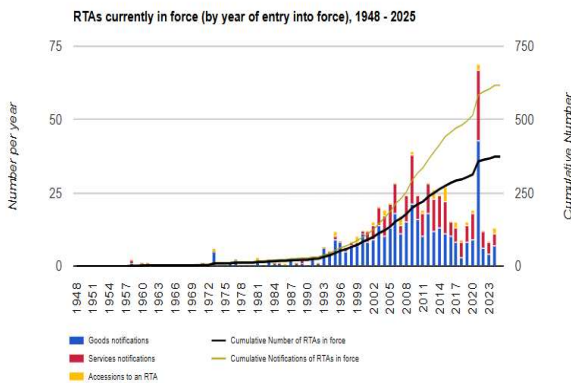


자료: 장영욱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2차 세계화의 물결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 하 국제무역 회복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현 세계무역기구)에 따른 관세 인하
 - 금(-달러)본위제 복원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 경제 공동체(EEC) 등 국제 경제기구 설립
- 세계화는 전후 “구미 경제의 황금기”에 결정적인 기여



자료: <https://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Table 1. European growth, 1890-1993 (average annual rate)

Period	Real GDP	Population	Real GDP	
			per caput	per hour
1890-1993	2.5	0.6	1.9	2.6*
1890-1913	2.6	0.8	1.7	1.6
1913-50	1.4	0.5	1.0	1.0
1950-73	4.6	0.7	3.8	4.7
1973-93	2.0	0.3	1.7	2.7*

Notes: * 1890-1987

† 1973-87

GDP and population are aggregates for 12 countries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Norway,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all adjusted for boundary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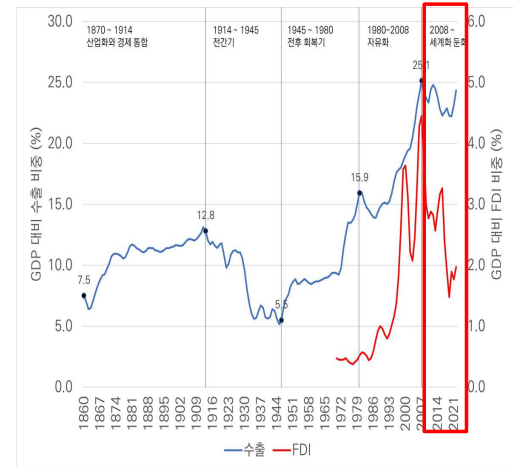
Sources: 1870-1989, Maddison, *Dynamic forces*; 1989-93, OECD, *Economic outlook*

자료: Craft 1995, p.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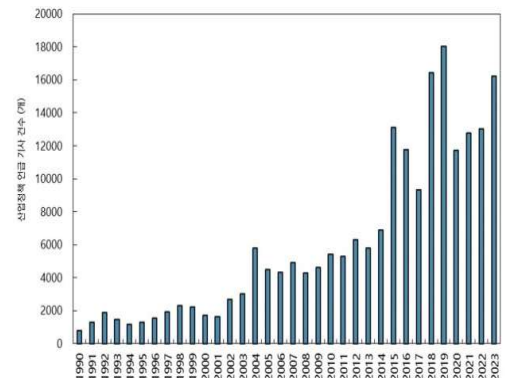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세계화의 둔화

- 트럼프는 원인이 아닌 결과?
 - 세계화의 둔화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관찰
 - 미-중 갈등, 브렉시트, 민족주의 운동, 극우파 약진...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자국우선주의와 함께 산업정책도 부활
 - 미국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상호관세 등
 - 유럽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역외보조금규정 등
 - 중국, 일본, 인도, 한국도 자국 생산기반 확충 위한 정책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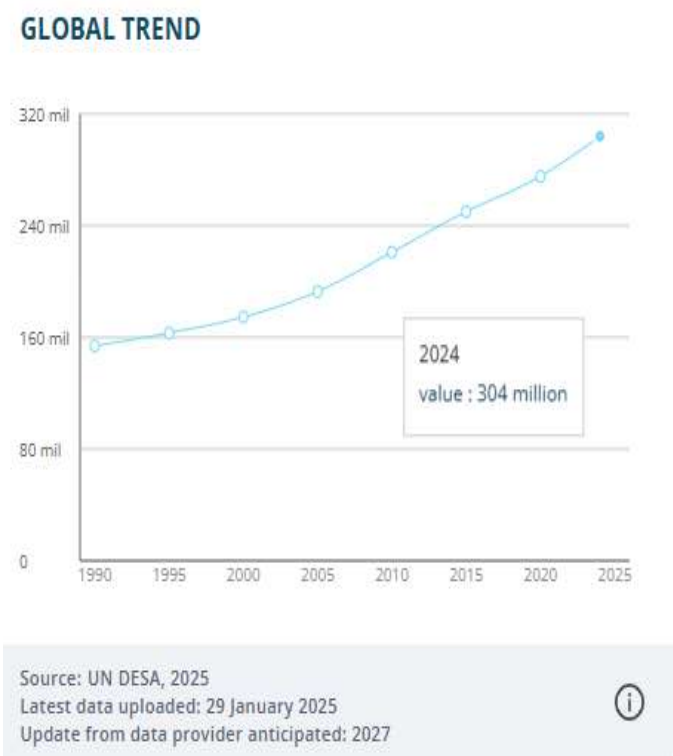
자료: 장영욱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자료: Evenett 외 2024, p.5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국제이민은 지속 증가 중



Foreign-Born or Home-Grown?

Share of the foreign-born population in selected countries in 2022 (in percent)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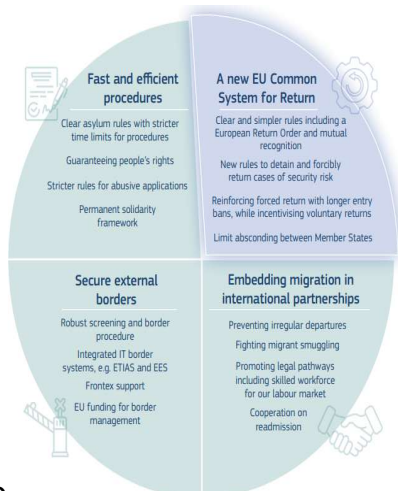
그러나 이민의 문 역시 좁아질 조짐

- 트럼프발 이민정책 강화 (아래 표 참고)
-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에서 국경 검문 강화와 임시 국경 통제, 난민 추방과 제3국 송환, 구금 기간 연장 등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책 잇달아 제정
- EU는 난민 불인정자나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자를 신속히 추방하고 장기간 구금을 가능케 한 새로운 규정 제안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 행정조치(2025. 1. 20.-6. 7.)

주제별 분류	행정조치	유형	발표
남부 국경 통제 강화	주(州)에 대한 침략(invasion)으로부터 보호	Proclamation	1.20
	미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Declaration	1.20
	미군의 영토 보전 보호 임무 명확화	Memorandum	1.20
	국경 보안 강화	EO 14165	1.20
	미국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 이민법 집행 강화	EO 14159	1.20
	Guantanamo Bay 해군기지 내 이민자 수용시설 확장	Memorandum	1.20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지역사회 보호	EO 14287	4.28
난민·이민 제한	국토안보부 기능 보호를 위한 국방부 군사력 동원	Memorandum	6.7
	난민 수용 프로그램의 조건 및 집면 중단	EO 14163	1.20
시민권 및 복지 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제한 ¹⁾	EO 14160	1.20
	국경 개방 정책에 대한 국민 세금 보조 중단	EO 14218	2.19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보험사 복지 혜택 차단	Memorandum	4.15
국가안보 목적의 입국 통제	Tren De Aragua 집단에 대한 적성국 외국인법 발동	Proclamation	3.15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	EO 14161	1.20
	외국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국 출신자 입국 제한	Proclamation	6.4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하바드대학교의 위협 요소 해결	Proclamation	6.4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5_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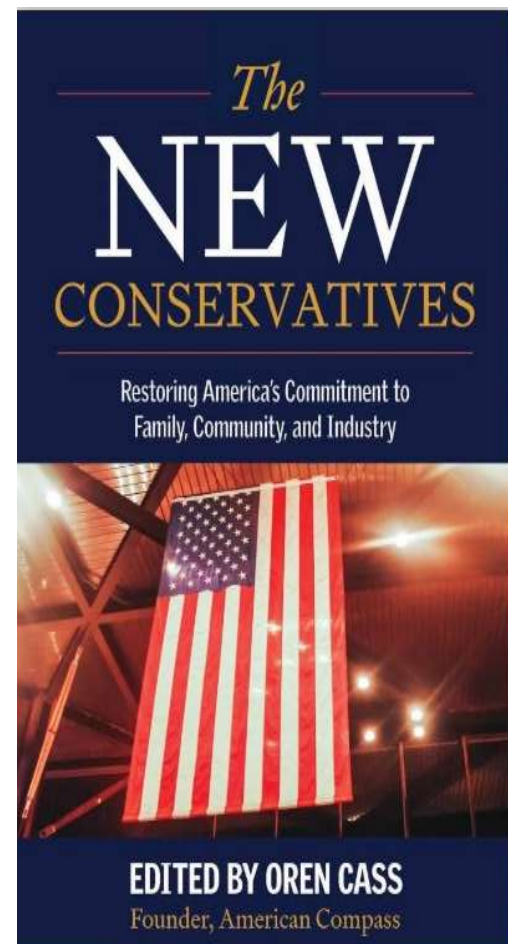
차례

-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 IV. 나가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새로운 보수주의자들

- 새로운 보수주의자들: 자유지상주의는 틀렸다!
 - 20세기 후반 보수주의자가 공산주의, 관료제/복지 팽창, 경직적 노조, 징벌적 세제, 살인적 물가와 싸우던 시절에는 “시장 원칙” 중시가 자연스러운 귀결
 - 그러나 자유시장 근본주의는 거래의 효율성에 집착하느라 지정학적 변화, 중국의 부상,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등 상황의 변화에 대응 못함
 - 그 결과 미국에선 생산, 가족, 자녀교육, 지역 공동체, 국민국가 등 전통적 가치 희생
-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해서 가족과 지역을 부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의 초점
 - 그간의 미국은 소비/금융에 경도되어 생산 경시 → 다양한 부작용 (지역 쇠퇴, 임금 감소, 결혼, 출산 어려움, 마약...)
 - 민족국가, 규범, 제도, 시장, 사회적 결속 등의 기반 위에 중국과 헤게모니 경쟁, 기술 독점, 지역 쇠퇴,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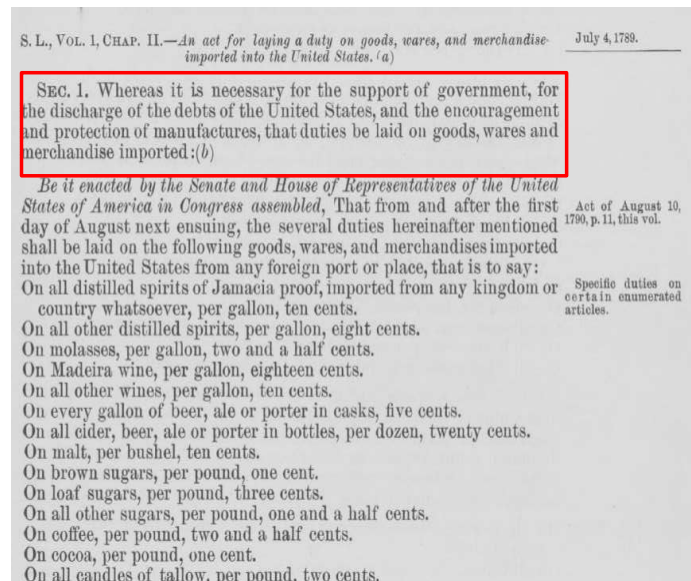
statement, as they all seemed to share the same one. The conservative think-tank world is dedicated to advancing the principles of “limited government, free enterprise, and individual liberty”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or “free markets and limited, effective government” (the R Street Institute), or “free enterprise, limited government, individual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or “individual liberty, limited government, free markets” (the Cato Institute), or “economic choic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Manhattan Institute), or “individual,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private enterprise;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Hoover Institution). What began as entirely justified advocacy for the benefits

Cass, O. The New Conservatives, p.8 (전자책 p.42)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American System의 미국 산업 보호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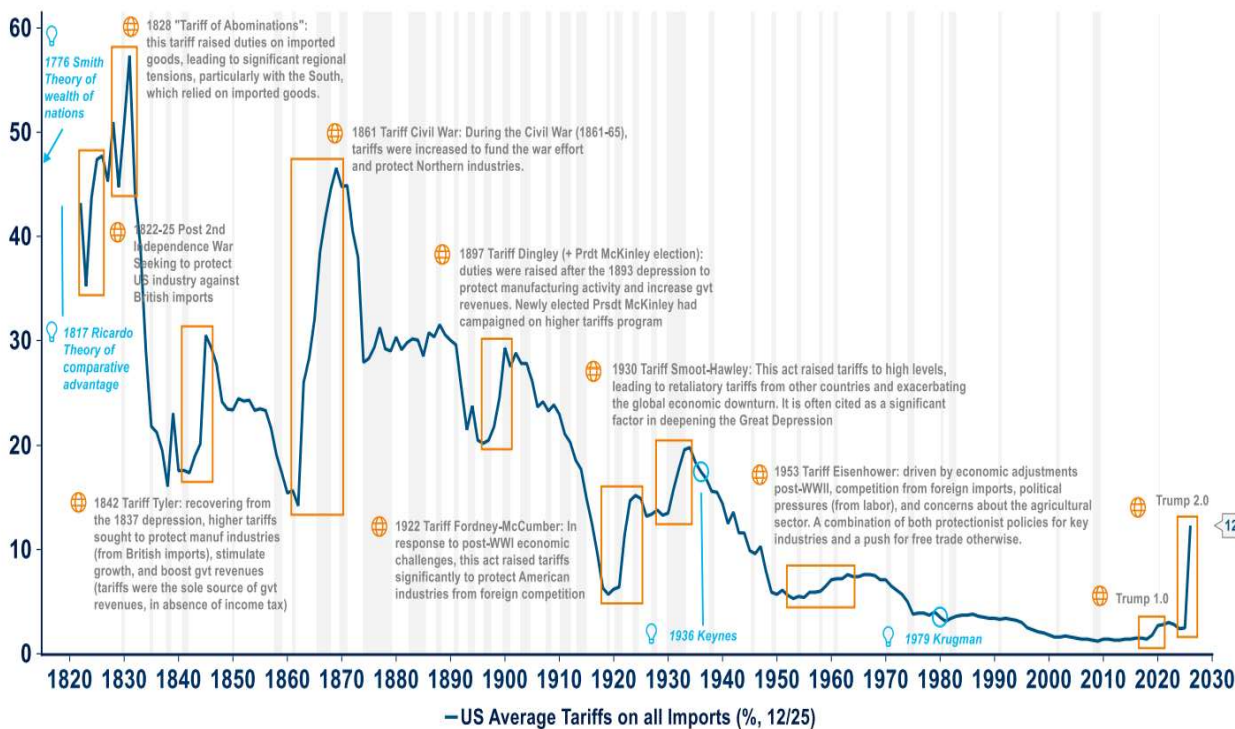
- American System에서 국가의 역할은 신생 산업을 보호·지원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그럼으로써 개별시민들이 물질적, 문화적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정의
 - 헨리 클레이, 알렉산더 해밀턴, 다니엘 레이먼드, 프리드리히 리스트, 헨리 찰스 케리, 아브라함 링컨 등이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항해 American System 고안, 발전시켜옴
- 1789년 7월 최초의 관세법 제정
 - 정부운영을 지원
 - 국가부채 상환
 - 제조업 보호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미국 관세 부과의 역사

A brief history of protectionism (with key trade-related economic theories)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

- 미국 무역적자 문제 심화, 지속 불가능
 - 국채 발행 통해 강달러 유지, 균형으로 회귀 안 됨 – 자유무역 원칙이 미국만 비껴가는 현상
 - 미국내 제조업 공동화 발생, 일자리 감소, 지역 커뮤니티 쇠퇴, 사회 문제 발생...
- 문제의 핵심은 “중국”
 - 국가내 불균형은 해소 가능하지만, 물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한 국가간 불균형 해소 불가
 - 중국 WTO 가입 후 미국의 기대와 달리 자유민주주의로 변화하지 않음
- 무역적자와 연동하여 보편관세 부과 필요
 - + 중국과 “hard break(투자 제한, 공급망 분리, 중국 유학생, 연구자 추방 등)”로 공산당 영향력 차단

Figure 1. U.S. Trade Balance as a Share of GDP, 1999-2023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Sources: Census; BEA; CEA calculations.
Note: Trade data are on a balance of payments basis. Gray bars indicate recessions.
As of May 30, 2024 at 3:00pm.

OPINION COMMENTARY Follow

Send Harvard's Chinese Students Home

It makes no sense for the U.S. to be educating the scientific and leadership class of a future adversary.

By Mike Gallagher
Aug. 19, 2025 4:28 pm ET

🔗 📄 🗨️ 1730 📄 Gift unlocked article 🎧 Listen (7 min) ⋮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특징

- 무역적자 해소 및 세수 증대를 위한 보편관세 + 품목별 관세 부과
 - 미국 국내법상 대통령은 ① 타국의 차별·불공정 행위(301조), ② 국가안보 위협(232조), ③ 환율 조작(122조), ④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관계(402조), ⑤ 전시 및 비상사태 (IEEPA) 등 다섯 가지 사안에 관세 부과 권한 보유
- 투자, 안보, 미국산제품 구매, 환율 조정 등 다양한 이슈가 무역정책과 연계되는 추세
- 제조업 보호를 위해 물가 및 경제성장 다소 희생

주요국 대미국 무역 합의 비교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합의 날짜 (미현지시간)	5월 8일	1차: 5월 12일 2차: 6월 10일 3차: 7월 29일*	7월 22일	7월 27일	7월 30일
상호관세 (8월 1일 시행)	10%(4월 발표) 유지	125%(4월 시행) → 10%(5월 시행)	25%(7월 서한) → 15%	30%(7월 서한) → 15%	25%(7월 서한) → 15%
주요 품목 관세	자동차 25%(최혜국 관세 포함 시 27.5%) → 10% 철강·알루미늄 25% → 0%	모든 중국산 품목 145%(2월 시행) → 30%(5월 시행) (상호관세와 페타닐 관련 관세 20% 포함) 소액소프 120% → 54% (5월 시행)	자동차 25% → 12.5% (기존 관세 포함 시 1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자동차 25%(최혜국 관세 포함 시 27.5%) → 1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 상호 무관세	자동차 25% → 15%
구매	100억 달러 규모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규모 구매
투자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 투자	미국에 6,000억 달러 (약 830.7조 원) 투자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약 487조 원) 투자
자국 시장 개방	에탄올·소고기·농산물·기계류 등 시장 개방		자동차·트럭·철·일부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완전 개방 (철·소고기 제외)
기타	미국 수출품 관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수입품 보복 관세 125%(4월 시행) → 10%(5월 시행) 대미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미일 조인트 벤처 설립		미국산 제품 무관세 수입

*8월 11일 만료되는 1·2차 합의 내용 90일 연장 잠정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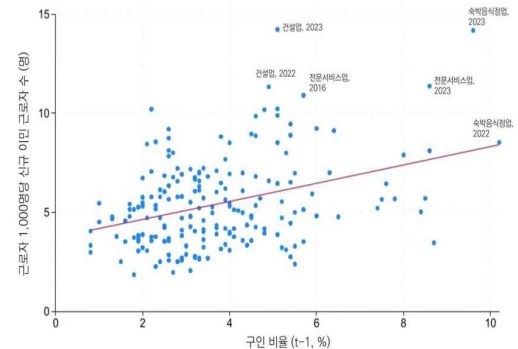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 20250731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트럼프 이민 정책

- “미국인이 하지 않을 일”을 대신 할 사람(주로 외국인)을 찾는 대신, 미국인이 할 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도모해야 함
 - 이민을 제한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이 더 원활히 일어날 것
 - 불법이민 강력 통제, 계절근로 폐지, 고숙련 근로자에게만 일시적으로 근로 허용 등 추진
- 자유시장 원칙은 “Bounded Market” 내부에서만 작동하므로, 경계 밖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통제 필요
 - 경계는 어떻게 정하나? (1) 민족국가의 주권, (2) 공통된 법적, 경제적 제도, (3) 시민 간 상호의존성, (4) 언어적, 문화적, 법적 장벽

그림 6. 산업별 신규 이민 근로자 유입과 구인 비율의 관계(2008-23년)



주: 2008-23년 사이 신규 이민 근로자 수와 1기 전 구인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포도이며, 붉은 선은 오차항을 최소화하는 적합값(fitted value)을 나타냄.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https://www.bls.gov/jlt>), IPUS USA, American Community Survey(<https://usa.ipeds.org/usa/>).

표 3. 회귀분석 결과: 주별 신규 이민자 유입과 노동 공급 부족, 확률효과 GLS 모형

구분	종속변수: 전체 신규 이민자 (1)	종속변수: 신규 이민자 (2)	종속변수: 신규 이민 근로자 (3)	종속변수: 신규 이민 근로자 (4)
구직-구인 비율 (-1)	-0.198*** (0.076)	-0.259*** (0.075)	-0.131* (0.077)	-0.200*** (0.078)
로그 연간임금 (-1)	7.377*** (1.298)	-2.886 (1.932)	9.245*** (1.031)	2.809 (2.029)
기존 이민자 비중		0.308*** (0.148)		0.390*** (0.094)
내국인 근로자 유입		0.009** (0.004)		0.005 (0.004)
상수	-72.736*** (13.819)	32.301 (20.371)	-94.124*** (10.971)	-28.320 (21.394)
주 고정효과	x	o	x	o
연도 고정효과	o	o	o	o
R ² (Overall)	0.504	0.883	0.551	0.803
관측치	765	765	765	765

주: 열(1)과 열(2)는 전체 이민자를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 결과이며, 열(3)과 열(4)는 종속변수를 신규 근로자로 한정했을 때의 결과임. 열(1), 열(2)는 구직-구인 비율과 연간임금, 연도고정효과를 넣었을 때, 열(3)과 열(4)는 다른 통제변수와 주별 고정효과를 추가하였을 때의 결과임.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 p<0.10, ** p<0.05, *** p<0.01.
자료: 각주 45)에 기입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부표 1] 참고.

III. 트럼프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효과

- 관세의 세가지 목적(수입 축소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자국 내 제조업 부흥) 상충
 - 관세로 인해 국외로부터 수입량이 감소하며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
 -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아 세수가 늘다면 무역적자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 현재와 같이 관세를 중간재와 원자재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제조업 부담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7월 고용 둔화, 물가 상승)
- 생산자를 위해 소비자 희생 -> 지속가능하지 않음

"It cannot be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o have been the contrivers of this whole mercantile system; not the consumers, we may believe, whose interest has been entirely neglected; but the producers, whose interest has been so carefully attended to; and among this latter class, our merchants and manufacturers have been by far the principal architects."
(Adam Smith, 1776, Chapter VIII, Book IV)

"To be precise [Colbert's mercantile policy] was literally a kind of indirect taxation, taxing the consumers through the monopolistic artisans... Industrial control thus stood revealed as naked fiscalism"(Eli Heckscher, 1935, pp. 180-182)

차례

I. 들어가며: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II. 세계화의 흥망성쇠

III. 고립의 경제적 비용

IV. 나가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IV. 나가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한미 FTA 종식?

- 한-미 무역합의로 FTA 상품 양허 스케줄 무력화
 - 상품무역(3~7장), 서비스무역(8~10장), 투자(11장), 규범(12~17장), 제도(18~24장) 중 명시적으로 파기한 것은 없음
- 한-미 정상회담 별탈 없이 끝났지만 통상, 안보 관련 이견 큼
 - 자동차 안전 규정, 농식품 개방, 3500억불 투자 대상 및 방식...
 - 합의문 작성 (의도적?) 불발
- 미 법원 판결, 중간결과 등에 따라 관세 합의 결과 반복될 가능성 존재

표 2. 양국 상품 양허결과

구분	우리나라 전체 품목				미국 전체 품목			
	품목 수	비중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품목 수	비중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10년 이내	11,068	98.3%	27,344	97.4%	10,423	99.2%	40,885	100.0%
10년 초과	161	1.4%	477	1.7%	82	0.8%	2	0.0%
제철/연행 관세	16	0.1%	213	0.8%	-	-	-	-
제외	16	0.1%	26	0.1%	-	-	-	-
합계	11,261	100%	28,060	100%	10,050	100%	40,887	100%

주: 2003-05년 3개년 평균 기준.
자료: 관세부처 협동(2012), '한미 FTA 주요 내용', pp. 16-17.

IV. 나가며: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

- 넓고 긴 안목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조망 필요
- 트럼프 예외주의?
 - 보편관세, 투자 압박, 동맹국 배척,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는 단기간에 끝날 수도
- 기존 세계 무역 질서 재편 노력은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될 것
 - 중국의 불공정 경쟁 행위, 핵심 안보 품목 대외의존, 자유 무역으로 인한 산업/노동자 피해 등 기존 자유무역 질서의 모순 극복 필요
 -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



A US appeals court has ruled that most tariffs issue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are illegal, setting up a potential legal showdown that could upend his foreign policy agenda.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3598.html>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에 기여할 방안 모색

- 미래의 대안은 자유롭고 포용적인 세계 무역 질서가 되어야 함
 - 1)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환으로 상호 이익을 누리되,
 - 2) 무역 참여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는 침해하지 않고,
 - 3) 자유무역의 이익을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노동자·지역에 재분배하는 질서
 - 미국 없는 세계 경제 질서 구축으로 미국의 참여 압박
 - 당장은 미국의 공세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집중
 - 미국 외 '유사상황국'과의 복수국간 자유무역 협정을 고도화해 '규칙 기반 무역 질서' 구축
 - Ex. EU-MERCOSUR FTA, 캐나다-EU 밀착, CPTPP, 한-일 FTA...
 -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기술·산업 정책 협력을 협정 아래 핵심 조항으로 포함해야 하며,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항 역시 필요
- + 국내 정치 통한 자유무역과 이민 유입의 불균등한 피해 교정

감사합니다

사례 1. 스무트-홀리 관세: 발단과 영향

- 1930년 6월 미국 후버 정부가 대규모 관세 인상 단행
 - 농장주 보호 위한 농업 관세 부과가 주목적이었지만 대공황을 거치며 제조업 품목도 대거 포함
 - 설탕, 담배, 면화, 철강, 화학 등 2만 여 품목에 대해 평균 관세율 20% 가량 인상
 - 평균 수입 비용 6% 증가 / 수입 12~18% 감소
- 보복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 캐나다 교역품의 약 1/3에 대한 관세 두배 인상 /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제조업 관세 50~167% 인상 / 그외 국가 직간접 보복 단행
 - 미국 수출 15%(직접보복 영향)~32%(간접보복 영향) 감소

사례 1. 스무트-홀리 관세: 대공황 심화

-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 회복 지연
- 관세 인상 대신 더 유연한 환율 운영 선택한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 등 소위 Sterling bloc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름
- 1930년 전미경제학회(NBER) 회원 1028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산업계 로비)와 국제금융제도(금본위제) 같은 제약조건으로 인해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발생

The Smoot-Hawley Trade War

Kris James Mitchener, Kevin Hjortshøj O'Rourke, Kirsten Wandschneider

The Economic Journal, Volume 132, Issue 647, October 2022, Pages 2500–2533,

<https://doi.org/10.1093/ej/ueac006>

Published: 01 February 2022 Article histor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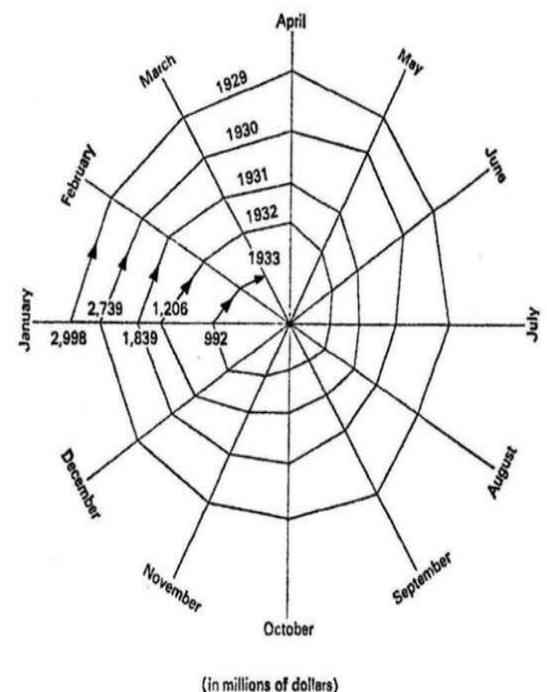
PDF Split View Cite Permissions Share ▼

Abstract

We document the outbreak of a trade war after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Smoot-Hawley tariff in June 1930. U.S. trade partners initially protested, with many eventually choosing to retaliate with tariffs. Using a new quarterly dataset on bilateral trade for ninety-nine countries, we show that U.S. exports to retaliators fell by 28%–32%. Using a second new dataset on U.S. exports at the product level, we find that the most important U.S. exports to retaliating markets were particularly affected, suggesting a possible mechanism whereby the United States was targeted despite most-favoured-nation obligations. The retaliators' welfare gains from trade fell by 8%–16%.

JEL: F13 - Trade Policy;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F14 - Empirical Studies of Trade, N70 - General, International, or Comparative

The contracting spiral of world trade, January 1929–March 1933: Total imports of 75 countries (monthly values in terms of old U.S. gold dollars [millions]).



자료: Kindleberger, C. P. (1986).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Vol. 4). Univ of California Press., p.170

사례 2. 중국인배제법: 발단

- 1882년 미국 중국인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 제정
 - 모든 중국인의 미국 입국 금지
 - 미국에 남아있는 중국인에게 시민권 부여 중단
 - 합법 체류자도 일시적으로 출국시 재입국 거부
 - 1943년 폐지까지 60년 존속
- 미국 서부 철도 부설과 광산 개발에 중국인 노동력의 공헌이 지대했으나, 아시아인에 대한 선입견과 혐오, 그리고 중국인이 백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으로 인해 특정 국적자를 배척하는 사상 초유의 법 통과

사례 2. 중국인배제법: 영향

- 미국 서부 남성 노동자의 12%를 차지했던 중국인 노동자는 중국인 배제법 입법 기간 동안 약 64% 감소
- 숙련된 중국인 노동자 이탈로 제조업 전체 피해
 - 서부지역 제조업 생산량 64% 축소
 - 백인 노동자 28% 감소하고 임금 수준도 하락
 - 배제법으로 백인 광산 노동자만 임금 상승 혜택 → 중국인 외 다른 외국인이 곧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이마저 단기적 혜택에 그침

140년 전 미국 '중국인배제법'이 준 교훈 [세상읽기]

수정 2025-03-25 08:11 등록 2025-03-25 07:00

기사 읽어드립니다

5:0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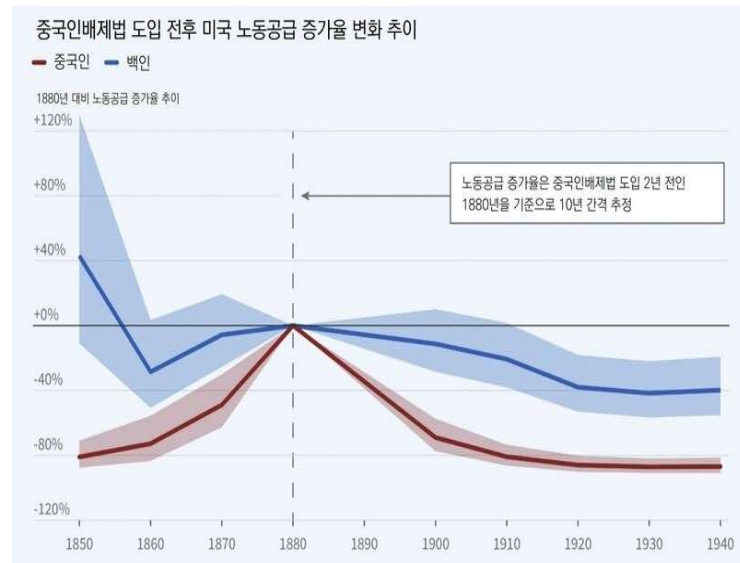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참여한 중국인 이민자들. 위키미디어 공용



장영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의 수많은 정책에는 이민 관련 정책도 다수 포함된다. 트럼프 이민정책의 골자는 신규 이민자 유입 차단과 기존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다. 남부 국경 통제와 난민 심사 중단, 일반 비자 심사 조건 강화가 전자라면 미등록 이주자 본국

송환과 임시보호지위(TPS) 취소가 후자에 해당한다. 엄격해진 국경 관리 여파로 정규 이민자와 여행자, 유학생의 입국까지 불안정해져 공항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에 어긋나더라도 트럼프는 거침이 없다.



자료: The Impact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Western US (No. w33019)

사례 3. 브렉시트: 주요 Timeline

표 1.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무역협력협정 합의까지 주요 사건

사점	내용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진영이 51.9% 득표(찬류 48.1%)로 승리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EU에 탈퇴 의사 전달
2017년 6월 19일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 개시
2019년 10월 17일	탈퇴 협정(개정안) 체결
2020년 1월 30일	탈퇴 협정 비준 완료
2020년 2월 1일	탈퇴 협정 발효, 공식적으로 영국이 EU를 탈퇴 *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를 두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가진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지속
2020년 12월 24일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 합의
2021년 1월 1일	이행기 종료
2023년 2월 27일	영국 북아일랜드-EU 간 통상절차 조정을 위한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
2024년 10월 2일	노동당 정부로 정권교체 후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의 브뤼셀 방문에서 영국-EU 간 관계 재설정 및 연례 정상급 회담 개최에 합의

주: 중앙유럽표준시(CET: Central European Time) 기준.

브렉시트의 이유

- EU분담금 vs 혜택
- 경제통합으로 인한 winners & losers
-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반발
- 독일,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



사례 3. 브렉시트

- 브렉시트 이후 5년간 영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①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②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③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④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⑤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함

그림 1. 영국 및 주요국 실질 GDP 추이

(20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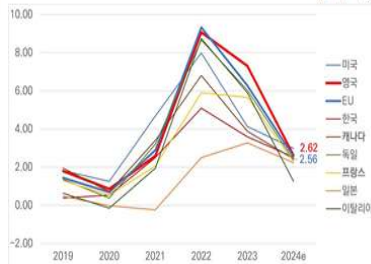


주: G7, EU, 한국의 2019년 대비 실질 GDP 추이.

자료: IMF(2024. 10.), "World Economic Outlook, 2024.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10/22/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4>
 (검색일: 2025. 2. 7.).

그림 2. 영국 및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주: G7, EU, 한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IMF(2024. 10.), "World Economic Outlook, 2024.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10/22/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4>
 (검색일: 2025. 2. 7.).

브렉시트 5년: 평가와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이철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관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임유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관 (yjim@kiep.go.kr, Tel: 044-414-1064)